

코로나 너머엔 ‘장밋빛’… 韓배터리 시장 시선집중

배터리 3사, 1분기 실적 적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 줄어
수요 급감 감안하면 괄목 성장

글로벌 시장에선 입지 탄탄
고객사 다양화, 투자 등 주효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주요 3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는 여전히 배터리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LG화학은 전체 영업이익의 2365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지부문에서 영업손실 518억원을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1049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삼성SDI도 올 1분기 계절적 비수기 및 국내 시장의 수요 약세,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전지의 판매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과 GM CEO 메리 바라 회장이 합작계약을 체결했다./LG화학

고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완성차 시장의 수요가 줄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타격을 입었지만,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

실제 LG화학은 지난 7일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CATL을 제치고,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27.1%로 1위에 올랐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6%, 4.5%로 4위와 7위를 기록했으며, 3사의 합계 점유율은 37.5%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배경으로는 고객사의 다양화와 해외 시장에 대한 지속 투자가 꼽힌다. 배터리 3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왔다.

LG화학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G·M·포드·폭스바겐 등 미국과 유럽에 공급처를 두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다임러·포드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SDI도 폭스바겐, BMW, 르노 등을 공급사로 두고 있다. 공급처의 다양화로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대한 지속 투자도 국내 3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지역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규제가 강화돼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시장이다.

LG화학은 이미 2016년 폴란드에 생산공장을 짓고, 지속적인 수율 개선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도 형가리 코마롬 지역 제1, 2공장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자동차 및 베이징전공과 함께 배터리 셀 공장 'BE ST'를 준공하고 제품 공급에 나섰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차량 보조금 목록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베이징자동차 '아크폭스'도 이름을 올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어려움

을 겪던 중국 시장에서도 긍정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배터리 업체 주요 고객사인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기는 하지만, 완성차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국내 배터리 업체에 보조금 미지급 등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LG화학이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코스닥 상장 계획을 철회했던 LS전선의 전기차 관련 부품 자회사 LSEV코리아는 아직 상장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시장에서 LSEV코리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시점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LS EV코리아 관계자는 “6개월간 유효한 상장 예비심사를 2월 중순경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미정이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수출 등 대폭 지원”

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무역금융 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R&D 등 다양한 분야서 인센티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수출·무역 등 다양한 분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하고 외국 전시회 참가, 해외 규격 인증, 온라인 수출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고용 유지 확약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최대 50% 할인해준다. 수출 바우처 기업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계의 고용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버스 운행 연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산하 기구로, 노동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련 14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예산 소요 없이 내부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발굴해 신속 추진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금융위 “고용유지 90% 유지 지켜야”

기간산업안정기금 일문일답

고용조건 일부 가감 가능성 있어
중소·중견 협력업체는 해당 안돼
기금, 경영 등 의결권 행사 안해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고용안정조건이 당초 취지와 달리 퇴색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기간산업을 뒷받침 하자는 목적”이라며 “세부 고용 안정조건과 관련해서는 고용총량의 90% 수준을 유지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시 고용안정방안 조건은 산업별로 달라지 수 있나.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된다. 다만 지원시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감될 수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이 7개에서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등 2개로 줄었다. 수혜업종이 줄었다고 보면 되나.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다만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은 피해문제가 이미 제기됐고, 자금수요가 폭약돼 포함했다. 그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뉴스

외 다른 산업은 실황과 자금 수요 등을 파악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간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시장에서도 지원이 어렵고 앞서 발표한 100조원 금융안정프로그램으로도 지원하기 어려운 비교적 자금수요가 큰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인 협력업체는 100조원 금융안정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원도 연결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계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기금운영심의회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추천인사들이 늦어질 경우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20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천절차에 어려움이 있진 않는

지 우려가 많다. 다만 국회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7명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는 이전과 변함이 없다.

“기존과 같이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고, 기금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다만 시행령에서 두 가지 예외사항을 담았는데 갑자기 따라 기금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든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기금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외사항 외에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을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